



윤석열의 재극우화와
정권 퇴진 투쟁

2~4면

우크라이나
전쟁

5면

독재자 퇴진 이후
방글라데시

6~7면

왜
국제주의인가

12~13면

가자 전쟁과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

14~16면



이주민 유입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8~11면

윤석열의 재극우화, 정권 퇴진 투쟁을 지지하자

관련 기사 2~4면

“반국가 세력에 대한 항전” 운운하는 윤석열의 재극우화

윤석열은 돌로 쪼개져 열린 광복절 기념식에서 정부의 안보 노선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가짜뉴스를 선동하는 “반국가 세력”으로 왜곡했다.

8월 19일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면서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은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총선 때까지 주춤했던 극우 행보를 재개한 것이다.

윤석열은 최근 고위직에 뉴라이트 인사들을 줄줄이 임명하며 극우적 색깔을 노골화했다.

안보 정책을 수립하는 실세라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호, 국방부 장관에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신원식, 통일부 장관 김영호, 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문수,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도 뉴라이트로 분류된다. 이진숙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했다.

또한 윤석열은 최근 한미일 군사 동맹 추진 속도를 높이면서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국사편찬위원장, 진실화해위원장 등 국가의 이데올로기 기관들에 뉴라이트 인사들을 줄줄이 임명했다.

뉴라이트의 주장은 일제 식민 강점을 정당화하는 일본 극우의 주장과 흡사하다.

가령 뉴라이트의 식민지근대화론은 한반도에는 자생적 발전 가능성이 없었는데, 일제가 자본주의를 이식해 이후 경제 성장의 기틀이 마련됐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일제 강점의 침략성·약탈성은 물론이고 그 불법성, 일본군 위안부와 징용 등의 강제성도 부인한다.

이런 자들을 급기야 독립기념관장에까지 임명하자 국가정보원장 출신의 광복회장 이종찬마저 격하게 반발한 것이다. 이종찬과 광복회는 8월 15일 광복절 정부 기념식에 불참하고 별도 기념식을 열었다. 민주당은 이 기념식에 참석했다. 광복절 행사가 처음으로 나뉘어 열린 것이다.

여기에 쐈기를 박은 것은 8월 16일 김태호의 “중일마” 발언이었다. 김태호는 KBS 방송에 나와 일본에게 억지 사과를 받아 낼 필요가 있냐며 “중요한 것



은 일본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런 언행은 단순히 친일파 등용의 문제가 아니다. 뉴라이트는 조선 독립 운동의 의의를 사실상 무시하는데, 이는 한반도 해방이 미국 덕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제헌 헌법은 물론이고 지금의 ‘87년 헌법’ 전문에도 실린 임시정부 법통 계승론까지 부인해 우파 내에서조차 반발이 컸다.

윤석열 정부는 미·중 갈등에서 미국 편을 확실히 들어야 한국 자본주의가 복합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 한미일 군사 동맹 구축으로 달려가면서 그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있다. 제국주의 범죄의 피해자들도, 홍범도 장군 등도 그 과정에서 내쳐지고 있는 것이다.

이데올로기 내전

국가의 안보 정책과 이데올로기를 관리하는 기관들에 뉴라이트 연구자들을 집중 배치한 것도 시사적이다. 윤석열은 국가 안보, 체제 수호의 미명하에 체제 정당화를 위한 이데올로기적 내전을 벌이려는 것이다.

뉴라이트 역사관은 역사를 “자유” 시장 자본주의가 승리하는 목적론으로 파악한다. 온갖 불의와 파괴, 살상도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수립과 성장으로 귀결되면 그것은 역사가 바른 길을 걸은 것이라는 식이다. 건국의 완성이 “자유” 통일이라는 것도 그 연장선에 있는 주장이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주인공인 이

우승열패의 세계관·역사관 아래서는 제국주의 강도 범죄들이 정당화되고, 현재 자본주의 체제의 수혜자들이 역사의 정당한 승리자가 된다.

1948년 미국 중심의 자유시장 자본주의 진영에 속한 반공·친미·독재 국가인 대한민국 수립에 동의하지 않은 세력들을 모두 실패자이자 배제 대상으로 치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제국주의 질서,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의 수혜자들이 가진 불평등한 특권도 뉴라이트에게 정당한 것이다. 친일·군사독재의 후예인 한국 지배계급을 미화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극도의 비도덕적 출세주의와 실용주의도 자본주의의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뉴라이트의 대안 현대사 교과서 운동을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신업계의 전경련과 경총이 적극 후원했던 이유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극우 이데올로기 재가동은 세계적 극우 부상이라는 맥락에 동행하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에 대한 반대를 이간하고자 장차 군국주의와 북한 위협을 빌미로 한 정치적 반대파 억압으로 표현될 수 있다.

윤석열의 광복절 기념사에 “민족”도 “일본”도 아닌 “자유” 단어가 50차례나 포함된 것과 19일 “반국가 세력”에 대한 “항전” 운운은 그 신호탄이다.

김문성

“용산과 차별화?”

한동훈은 본질적으로 윤석열을 지키려 든다

많은 매스 미디어가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 이른바 ‘윤·한 갈등’을 비중 있게 보도한다. 심지어 일부는 한동훈이 중도 표심을 얻으려고 이재명과 경쟁을 벌인다고 표현하기까지 한다. (“한동훈은 좌클릭, 이재명은 우클릭”이라는 식으로)

한동훈이 정부 입장과 달리 채해병 특검에 찬성한 것이 특히 거론된다. 한동훈이 6월 말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할 때 ‘제3자 추천 형식의 채해병 특검법’을 공약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동훈은 당대표가 되자마자 채해병 특검에 대한 입장 내놓기를 회피하거나, 측근들의 입을 통해 ‘하나의

안이였을 뿐 선제적으로 발의할 생각은 없다’는 식으로 슬그머니 발뺌했다.

최근에는 이재명 등 민주당 지도부가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하겠다고 하자, 추가 역제안을 하며 시간을 끌려고 한다.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한 사람을 찾아내, 민주당과의 공모 여부를 수사하자는 것이다. 임성근을(따라서 윤석열을) 구하려는 수작이다.

한편, 최근 한동훈은 윤석열이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광복절 특사로 복권하자 이를 간접적으로 의의제기했다. 김경수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옳은 지적이었다. 그러나 이것도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식이었다.

그리고 윤석열이 원세훈, 조윤선, 조현오, 강신명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하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자들을 대거 복권시킨 데 대해서는 침묵했다.

물론 윤석열(·김건희)과 한동훈 사이에 갈등이 있고, 한동훈이 때로 ‘차별화’를 시도하는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윤석열이 박근혜 탄핵 직전 지지율과 비슷한 긍정 평가 20~30퍼센트, 부정 평가 60~70퍼센트 선을 반년째 탈피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그와 완전히 동일시하는 것으로 비쳐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차별화’는 어디까지나 깊은 위기에 빠진 정부·여당을 다시 일으켜

▶ 3면으로 이어짐

왜 윤석열 정부는 ‘건국절’ 역사 전쟁을 벌이나?

김현옥 고등학교 역사 교사

윤석열 정부의 강경 우경화 시도가 역사 전쟁으로 드러나고 있다.

8월 8일 ‘뉴라이트’ 김형석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자, 광복회와 독립운동가 단체들이 반발했다. 이로 인해 올해 광복절 행사는 돌로 쪼개졌다.

김형석은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이 진정한 광복”이라고 발언해 건국절 논란에 불을 지폈다. 또, “일제 시대에는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우리 국민은 일본 신민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반발을 산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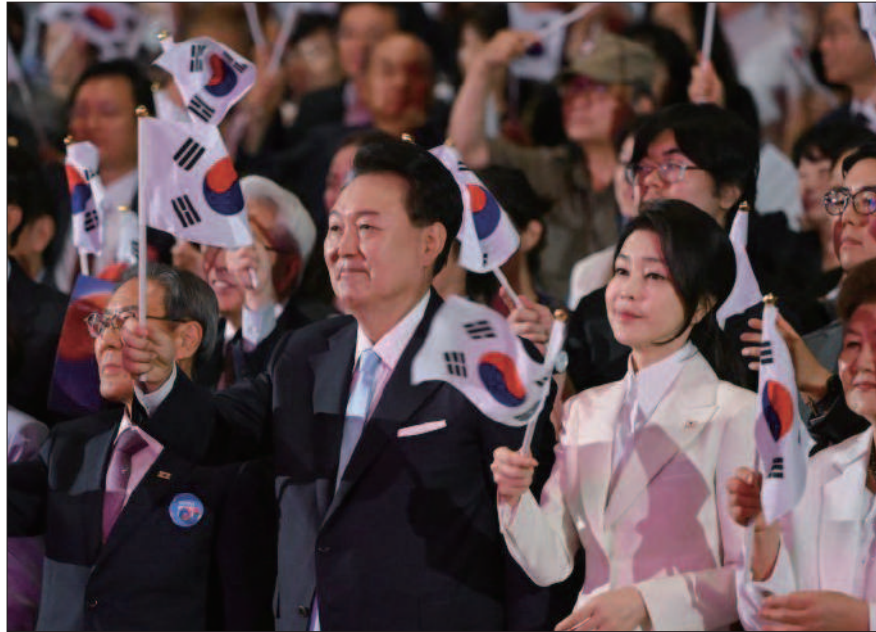
이미 윤석열은 건국절 논란의 핵심인 뉴라이트 인사들을 주요 자리에 임명해 왔다.

가장 대표적인 인사는 김영호 통일부장관이다. 그는 뉴라이트 학자 모임인 ‘뉴라이트 싱크넷’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그가 주도해 만든 ‘한국자유회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를 갖고 있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낙년 교수는 식민지근대화론의 가장 열렬한 옹호자이며 독도가 우리 영토라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최근 서울 지하철역 3곳에 설치됐던 독도 조형물이 철거됐는데, 이러한 역사 인식의 반영이 아닐까 싶다.

이 외에도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박지향, 국사편찬위원회 허동현 위원장도 뉴라이트의 핵심 인물이다. 이런 상황에서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기념관장마저 ‘뉴라이트’로 지목된 김형석을 임명하자 분노가 터져 나온 것이다.

독립기념관장 인사로 논란이 뜨거운데, 윤석열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제국주의 식민 지배에 대한 비판 없이 “1948년 자유민주주의 헌법 제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자유민주주의”와



이승만의 “건국 운동” 찬양하며 뉴라이트의 건국절 논리에 힘을 실어 오다

“시장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뉴라이트의 건국절 추진에 힘을 실었다.

지난해 광복절 후에도 윤석열은 홍범도 장군의 육사 흉상 철거 논란으로 역사 전쟁을 시도한 바 있다.

윤석열이 우파로 사장을 교체한 KBS도 이에 동조하고 나섰다. 광복절에 푸치니 오페라 ‘나비부인’을 방송하면서 ‘기미가요’를 내보냈고, 이승만을 미화한 다큐멘터리 ‘기적의 시작’을 방영했다.

이미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에 ‘건국전쟁’ 영화를 통해 이승만 띄우기에 나선 바 있고, 최근에는 박정희 관련 영화 ‘그리고 목련이 필 때면’과 ‘박정희: 경제대국을 꿈꾼 남자’ 상영을 통해 박정희 띄우기도 본격화하고 있다.

또, 윤석열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 인권과 핵무장을 핑계 삼아 “자유 통일”을 강조했다. 이는 뉴라이트 성향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말하는 ‘자유 북진’의 연장선으로 사실상 흡수통일 방안이다. 이승만의 ‘북진 통일론’은 남북 사이에 긴장을 고조시키고 결국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한 원인이 됐다.

윤석열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동맹 및 우방국들과 자유의 연대를 공고히

하겠다”고도 했는데, 이는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은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을 맞아 “철통 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연결된 안보 협력”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윤석열은 일본 제국주의의 과거사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강제동원 표시 없는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내각이 자국 역사를 세탁하는 데 발견한 완벽한 공범”이라는 내용의 글이 실릴 정도다.

광복절 경축사에 일본 제국주의 식민 지배에 대한 비판이 없다 보니, 여당에서조차 “과거사를 언급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본 신문들은 “광복절 연설에서 일본과 관련한 생각을 언급하지 않은 건 이례적”이라고 보도했다.

‘건국절’과 역사전쟁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를 비롯한 우파들은 왜 건국절을 추진하려고 하는가?

우선, 1948년 건국절을 부각하면 친

일파와 미군정에 협력했던 자들이 도리어 독립과 건국의 공로자가 된다. 친일파 출신이 포함된 현 기득권 세력에게 정통성이 부여되는 것이다.

반면, 일제 강점기의 사회주의 운동 등 독립 운동, 김구의 단독정부 수립 반대 운동 등은 사실상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것으로 이해된다. 일제 식민지 시절에는 남한 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조선의 사람들은 일본 신민이었고, 따라서 친일 활동은 문제가 없는 것이 된다. 반면 항일 독립 투사들의 역사적 의미는 축소된다.

무엇보다, 뉴라이트는 자본주의를 절대선이라고 보며, 남한 자본주의 성장의 출발이 1948년 대한민국 수립에 있음을 강조한다. 그러면 식민지 조선을 ‘근대화(자본주의화)’시킨 일본 제국주의의 구실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윤석열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헌법 정신은 우리가 누리는 풍요와 번영의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 자본주의의 성장을 지배계급의 공으로 돌리고 친시장주의 노선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좌파를 단속하는 데 활용된다. 뉴라이트 역사관이 다종의 위기에 직면한 윤석열 정부가 노동계급을 공격하는 데 정당성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뉴라이트들은 냉전 경쟁의 한 복판에서 미군정의 도움으로 국가가 수립됐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냉전 반공주의와 친제국주의 노선은 오늘날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미·중 갈등 속에서 한미일 군사 동맹 추진을 정당화해 준다.

그러나, 미·소 제국주의 경쟁의 결과로 남북한은 분단됐고, 남북한 민중 모두 한국전쟁과 권위주의 통치의 고통 받아야 했다.

미군정과 그 후원을 받는 이승만·친일파 건국 세력은 해방 후 공장자주관리 운동, 1946년 9월 총파업과 10월 인민항쟁을 탄압했다. 무엇보다 1948년 이승만의 대한민국 정부는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 제주 4.3항쟁을 잔인하게 짓밟고 탄생했다.

진정한 독립과 해방을 원한 노동자·농민 운동과 좌파를 잔인하게 탄압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야말로 건국절 추진 세력이 진정으로 노리고자 하는 바다.

지금 윤석열과 우파들이 역사전쟁을 벌이는 이유다.

▶ 2면에서 이어짐

보려는 데(구원투수) 그 목적이 있다.

한동훈은 특히 탄핵 요구를 비난한다. “국민은 야당의 탄핵 공세에 피로감을 느낀다”며 심지어 “사기탄핵 공작 진상규명” TF를 만들었다.

무엇보다 한동훈은 정부 위기의 근본 원인인 노동자 등 서민 생계난 위기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점에서 윤석열과 하나도 차이가 없다.

그는 당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민생이라는 진짜 전장”에서의 정부와 여당의 단합을 강조했고, 국무총리 한덕수는 “특히 연금·노동·교육·의료개혁 등이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요 개혁 과제”라고 말했다.

한동훈은 정치적 억압을 강화할 간첩죄 적용 확대도 주장한다.

그런데 최근 이재명은 금투세와 채해병 특검안에서 후퇴하며 윤석열과 한동훈에게 또다시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있다.

이런 우경화와 책략 따위로는 절대로 우파를 약화시키지 못한다. 그러기는커녕 위기의 윤석열 정부에게 산소 호흡기나 달아 주는 셈일 것이다.

김승주

민주노총·진보당의 윤석열 퇴진 투쟁 지지하자

노조법 2·3조 개정과 방송4법 개정
에 대한 윤석열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
후 민주노총과 진보당은 윤석열 퇴진 투
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8월
20일 탄핵 추진을 공식 선언했고, 정의
당과 노동당은 사안별 논평만 내고 퇴진
투쟁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가 벌이는 경제 위기 고
통 전가, 서방 제국주의 지원, 극우 이
데올로기 공세를 더는 참기 힘들다. 게
다가 윤석열은 총선 참패 후 넉 달 만에
다시 우경화를 추진하고 있다. 가뜰이
나 원래 매우 우익적인 정부가 말이다.

이런 때 좌파 정당과 노동운동이 대
정부 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8월 17일 서울 광화문 사거리에서 열
린 “노조법 · 방송법 쟁취! 거부권 거
부 범국민대회”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정권 퇴진 투쟁
에 앞장서겠다며 이렇게 다짐했다.

“[윤석열 정부에 맞서] 민주노총이 충
분히 싸우지 못했다. 강하게 맞서지 못
했다. 그 결과 윤석열 정권 2년 3개월
동안 이 나라는 만신창이가 됐다. ...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
는 선두에 서자.”

민주노총 지도부는 9월 28일 민중대
회, 11월 전국노동자대회, 12월 민중총
궐기로 이어지는 투쟁 계획을 토론 중
이다. 12월에는 정치 파업을 할 생각도
있는 듯하다.

노동조합이 협소한 경제주의와 부문
주의를 넘어 반정부 투쟁을 하겠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특히, 비록 하루 이
틀 하는 수준일지라도 불법 논란과 탄

압을 감수하고 윤석열 퇴진 파업을 하
려는 것이 반갑다.

이런 정치 투쟁은 윤석열 집권 후 답답
함과 불만이 큰 선진 노동자들의 의식과
투지를 고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가장 좋기로는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
권이 퇴진할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벌이
고, 생계비 저항과 차별 반대 운동이 결
합되고, 좌파가 매우 광범한 연대를 건설
해 정권을 몰러나게 하는 일일 것이다.

지금 당장은 그런 파업을 벌이는 것
이 어려워 보여도, 기층의 자발성을 고
무해 조합원들의 자신감과 투지가 고
양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1996년 연말과 1997년 1월에도 민주
노총은 3주 동안 정치 파업을 벌여 정리
해고제와 파견근로제 등을 유예시키고
김영삼 정부를 말기적 위기로 내몰았다.

파업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항의,
해병대원 사망 책임 규명과 수사 은폐
에 대한 항의, 한 · 미 · 일 군사 동맹 추
진에 대한 반대 등 각각의 대정부 투쟁
들을 서로 연결하고, 노동자들의 경제
투쟁이 결합돼 투쟁이 전 계급적이 되
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야당인 민주당도 정권 퇴진
투쟁에서 연대 · 연합의 대상이 돼야
할까 하는 문제를 놓고 노동운동은 의
견이 갈려 있다.

2016~2017년에 벌어진 박근혜 정
권 퇴진 촛불 운동은 승리했지만, 결국
민주당 집권과 문재인 정부의 배신으
로 귀결됐다. 이는 반사이익을 얻은 우



대정부 투쟁들을 서로 연결하고, 노동자들의 경제투쟁을 결합시켜 전 계급적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파의 부활로 이어졌고, 이는 지금 벌여
지는 윤석열 퇴진 운동의 성장에 제약
요인이다.

윤석열 퇴진 투쟁에서 민주당으로부터
의 정치적 독자성을 견지해야 한다.
민주당은 개혁 입법 요구를 (선별적으
로) 수용하는 대신, 윤석열에게 화전양
면 작전을 쓰면서, 저항이 정권 퇴진 같
은 급진적 투쟁으로 발전하지 않는 수
준에서 제어하려 한다. 지배계급에게
도 잘 보이려는 민주당은 윤석열 퇴진
파업도 결코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2년째 윤석열 정권 퇴진 촛
불 집회를 이어 온 촛불행동을 “민주당
2중대”로 간주하며 연대에서 배제하자는
일각의 주장은 잘못됐다.

촛불행동은 민주당 당론과 무관하게
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어 왔고, 화물연
대 투쟁, 건설노조 투쟁 등을 지지하고,
윤석열의 부자 감세, 개혁 입법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일관성은 부족해도
민주당의 나쁜 입장과는 다르거나 그
것을 비판한 적도 많았다. 양회동 열사
같은 노조 투사가 촛불행동에 가입한
이유일 것이다.

물론 촛불행동은 대중 투쟁을 강조
하면서도 한편에선 윤석열 퇴진 경로를
국회 탄핵으로 삼는 “투트랙 전략”
을 추구해 결국 민주당의 영향을 받는
모순을 안고 있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
등 서민층을 위한 사회경제적 요구를
강조하지 않는 약점이 있다.

그럼에도 촛불행동을 배제하겠다는
것은 대중운동의 단결에 도움이 안 된
다. 정권 퇴진 투쟁에서의 연대 기준이
정권에 대한 첨예한 반대가 아니라 중
도 정당 지지 전력이 되는 것은 사실은
대중운동을 키우려는 관점이 아니라

선거를 중시하는 관점의 발로다.

불가피한 경우 특정 (입법) 쟁점에서
민주당과 입법 공조를 할 수도 있고, 윤
석열이 부당한 탄압을 하는 것이라면
그 대상이 민주당 정치인이어도 방어
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 지향적 (“진보”) 정당들은
전술적 차원을 넘어 전략적으로도 민주
당과 공조하는 노선을 추구해 왔다. 심
지어 법안 발의 단계에서부터 민주당과
의 공조와 협상에 초점이 가 있다.

지금 민주노총이 참가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이나 ‘노조법
2·3조개정운동본부’ 등 연대체에도
민주당과의 전략적 동맹, 총선 연합을
추진해 온 정치단체들이 포함돼 있다.
특히,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와 지나
치게 밀착했었다.

민주노총은 최근 이 연대체들과 공
동 집회를 열고, 이 연대체들은 민주당
과도 연합 집회를 열었다. 민주노총과
이 연대체들 모두가 민주당이 요구한
법안 내용 삭감에도 동의했다.

이런 친민주당 정치단체들에 대해서
는 연대 배제를 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촛불행동 배제론은 일관성도 전혀 없다.

민주당 주도성에 대한 경계는 대정
부 투쟁들이 서로 연결돼 전 계급적이
되도록 해, 노동계급이 시위와 파업에
서 주도적 구실을 한 효과로 좌파가 주
도함으로써 해낼 수 있다.

정치 투쟁의 성공적인 고양은 광범
한 경제 투쟁들로 이어질 수 있다.

요컨대,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을
성장시켜 노동자 계급의 의식과 사기
와 자신감을 고양시켜야 좌파는 저항
이 승리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김문성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 핸드폰 결제 가능



ws.or.kr/subs2

구독 문의: 02-777-2792, wspaper@ws.or.kr



ws.or.kr/online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검색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노동자 연대” 검색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엔코리아 현재주소: 서울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16 4층
전화: 02-777-2792 제보: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paper@ws.or.kr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34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로 진격한 목적

찰리 김버

서방의 지원에 고무된 우크라이나는 최근 러시아 영토를 점령해, 패색이 짙어지는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전쟁광들의 동맹인 나토가 제공한 무기를 이용해 우크라이나는 미국 제국주의가 러시아 제국주의를 상대로 벌이는 대리전의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

우크라이나 남부와 동부에서 처절한 수세에 몰려 있었던 우크라이나군은 8월 6일부터 러시아의 쿠르스크 지역으로 공세를 감행했다.

공세 개시 10일 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마을 82곳과 1150제곱킬로미터의 러시아 영토를 장악했다고 발표했다.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올해 우크라이나에서 추가로 장악한 영토보다 더 넓은 영토를 장악한 것이라고 '전쟁 연구소'(ISW)는 분석했다.

이스라엘의 중동 확전 위협과 때를 같이하는, 우크라이나군의 공세에 대한 서방의 지원은 위험천만한 모험이다.

전에 러시아 정부는 자국 영토를 직접 공격하면 핵무기를 쓸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현재 러시아가 핵무기를 쓰려 한다는 징후는 없지만, 그 경고는 러시아 영토 공격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분명하게 보여 준다.

지난해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처참하게 실패한 상황에서 이번 공세는 우크라이나 측의 사기를 높여 줬다. 이번 공세의 목적은 러시아의 통치자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굴욕을 주고, 우크라이나군 포로와 교환할 러시아군 포로를 확보하고,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맞서 완충 지대를 확보하는 것이다.



젤렌스키는 전과를 올려 지속적인 무기 지원의 필요성을 서방에 납득시키려 한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애국 열기를 되살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징집을 피해 해외로 떠났고, 사람들이 징집관과 충돌하는 일도 여러 번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이번 공세가 종전 협상의 “공정한”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그 공세는 평화 협상을 중단시키는 효과를 냈을 뿐이다.

원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카타르의 중재하에 이번 달에 카타르 수도 도하로 각자 대표단을 보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의 급습으로 협상이 틀어졌다. 러시아 관료들은 대표단 파견을 연기했다. 한 외교관은 러시아가 “협상을 중단한 것은 아니며, 러시아 측은 다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 외교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그와 상관없이 도하로 대표를 보내려 했지만, 카타르는 한 측만 참석하는 회의를 주선하고 싶지 않아 했다고 한다.

사실 우크라이나가 가장 중요하게 계산한 것은 전과를 올리면 지속적인 무기 지원의 필요성을 나토에 납득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서방 지배계급의 일부는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는 것이 승산 있는 베팅인지 확신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대리전의 유용성

미국과 영국, 그 동맹국들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역량을 소모시킨다는 유용성이 있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조 바이든은 이 대리전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할 기회가 왔다고 으스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서 승리하면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겪은 패배를 극복하고, 나아가 중국과의 대결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연이어 패배를 겪자 그 전쟁은 미국에 덜 이로워 보였다.

미국 공화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비 지원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백악관 재임성에 성공한다면, 그는 바이든에 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의 고문들은 트럼프가 중국과의 경쟁에 더 집중하기를 바란다.

최근 독일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신규 군사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무기를 추가로 지원할 여력이 없다면서 말이다. 영국 노동당 정부의 총리 키어 스타머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을 부추기는 데서 가장 앞장설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급습으로 전황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젤렌스키는 쿠르스크 침공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시인했다. 우크라이나군은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작전을 펴다가 러시아가 증원한 정예 병력에 참패할 위험이 있다.

가장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지난 2년 반간 이어진 전쟁이 죽음으로 점철된 교착 상태로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언제나처럼 서방 언론과 정치인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범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학살을 부추길 것이다.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애초부터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이웃 국가들에 관철하려는 반동적인 행위였다. 이제 푸틴은 자국 영토가 점령당하는 굴욕을 겪고 있다. 비록 일시적일지라도 1944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서방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자신들의 제국주의적 경쟁을 위한 전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동방의 제국주의든 서방의 제국주의든 제국주의는 더 많은 참상만을 가져올 것이다.

서방이 훈련시킨 군대가 러시아로의 진격에 투입되다

러시아 영토 급습에는 영국제 탱크와 영국이 훈련시킨 병력이 많이 동원됐다.

영국 정부가 제공한 챌린저2 탱크가 공세의 중심에 있었다. 영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그 탱크를 이용할 “명백한 권리”가 있으며 그 권리에는 “러시아 내에서 군사 작전을 펼” 권리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타임>은 러시아 쿠르스크 공격에 참여한 우크라이나 병력이 영국

에서 훈련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쿠르스크로 파병되기 한 달 전 우크라이나 부대의 일부가 영국으로 파견돼 영국 군인들과 함께 며칠간 훈련을 받았다.”

이번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영토 공격에는 서방이 제공한 무기가 동원됐다. 그중에는 미국의 브래들리 장갑차와 스트라이커 장갑차, 독일의 마르더 장갑차도 있다.

그중 어느 국가도 자국이 제공한 무

기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공격한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미국이 제공한 하이마스(HIMARS,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도 공세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 ‘미국의 소리’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전 우크라이나군 참모부 대변인 블라디슬라프 셀레즈노프(올라디슬라우 셀레즈노우)는 하이마스가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는 데서 핵심적 구실을 했다”고 했다.

“러시아군의 진정한 재앙은 하이마

스였다. 러시아군의 막대한 무기와 장비, 병력을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다.”

<텔레그래프>는 이렇게 환호했다.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채웠던] 수갑을 느슨하게 풀어 줬다. 5월에 서방은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로 러시아 땅을 공격하는 것을 허용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러시아로 진입하는 우크라이나의 작전을 암묵적으로 승인했다.”

출처 Charlie Kimber, 'What's the aim of Ukraine's push into Russian territory?' (2024. 8. 18) / 번역 이원웅

독재자 퇴진 이후 방글라데시 운동은 어디로?

지난주 증오스러운 독재자 셰이크 하시나를 타도한 학생과 민주주의 활동가들은 그들의 온전한 승리를 막으려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지난주 방글라데시에는 85세이고 노벨상을 수상한 바 있는 무함마드 유누스가 이끄는 임시 정부가 들어섰다.

유누스는 [빈민을 위한] 소액 대출 제도를 창시한 인물로 많은 학생 활동가들의 선택을 받았고, 빈민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인기를 누리고 있다. 유누스 내각에는 나히드 이슬람과 아시프 마흐무드처럼 반정부 시위를 이끈 학생 활동가들이 포함돼 있다.

지난주에 군부, 제도권 야당 방글라데시국민당(BNP), 학생들이 회동한 뒤 유누스가 임시 정부의 수반으로 임명됐다.

그 회의에서 모든 대표자는 온전한 민주적 선거를 석 달 내에 치러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학생들은 옹게도 군부가 임시 정부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권한 유누스는 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유누스는 구 정권은 죽었고 장차 민주적 변화가 도래할 것이라고 학생들을 납득시키는 것을 자신의 첫째 임무로 여긴다. 그러나 유누스는 지배계급을 향해서도, 나라를 안정화하고 국가의 권위를 되살릴 책임자가 자신임을 확인시키고 싶어 한다.

“여러분이 저를 믿어 주셨고, 학생들

이 저를 불러 주셨고 저는 그에 응해 여기에 섰습니다.” 유누스가 자신을 에워싼, 자기보다 수십 살 어린 학생들에게 한 말이다. 또한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 나라 어디서든 누구도 공격당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째 책임입니다.”

유누스는 짧은 입장 발표에서 아부 사이드를 언급할 때 애써 눈물을 참았다. 아부 사이드는 경찰에 살해된 시위 참가 학생으로, 그 장면이 카메라에 담기면서 반란의 불길이 커지게 됐다.

유누스는 이렇게 호소했다. “이 나라가 무질서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막아 달라는 게 저의 첫 당부입니다.” 실제로 방글라데시에서는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 증오의 대상인 경찰은 거리에서 사라졌고 사람들을 피해 숨었다.

경찰에게 죽거나 다친 동지들의 복수를 원하는 학생들이 경찰을 색출하고 경찰서를 불태우고 있다. 또한 많은 지역에서 학생들은 현지 모스크와 협력해 질서를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다.

공공업무는 대부분 마비됐고 경제는 엉망이 돼 외환보유고가 줄고 있다. 국가 기구가 대부분 붕괴하면서 극도의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지역 강국인 인도와 중국은 방글라데시 상황을 우려스럽게 주시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전략적 세력 균형이 틀어지지 않도록



독재자를 타도한 운동은 방글라데시에 만연한 불의와 빈곤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기도 하다

태세를 갖추고 있다. 인도는 방글라데시 지배계급과의 긴밀한 관계를 중시하는데, 인도의 숙적 파키스탄에 맞설 방벽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 제국주의와의 경쟁의 일환으로, 방글라데시를 자신의 경제 권으로 한층 더 끌어들이려 한다.

군부는 유누스를 지지한다고 말하고 아직까지는 권력을 찬탈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 수뇌부는 오랫동안 옛 아와미연맹이 이끌던 국가에서 부패한 돈을 받아 왔다.

그러나 이제 아와미연맹은 무너졌고, 셰이크 하시나는 지난주에 망명했고, 다른 지도적 인사들은 분노한 학생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다.

군부의 이해관계

방글라데시의 장성들은 자신들이 “질서 회복”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임시 정부에 압력을 넣으려 할 것이다. 또한 군부의 권력과 돈을 유지시키라고도 압력을 넣을 것이다.

그들은 지금 당장 군부 정권을 내세우려 들면 대중 운동이 다시 촉발되는 등 너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20만 병력으로는 1억 7000만 명이 넘는 인구를 통제하는 것이 쉽지 않고, 군부는 대중 사이에서 인기나 신뢰가 별로 없다.

그러나 군부는 지배력을 되찾으려 할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 정당 방글라데시국민당(BNP)이나 우파적 이슬람 정당 방글라데시 자마트-에-이슬라미가 정치적 공백을 메우려 시도할 위험도 있다.

수도 다카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 활동가 무슈투크는 <소셜리스트 위커>

에 학생 지도부도 그런 위험을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학생들의 대규모 반란은 하시나 한 명만 몰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독재 체제까지 해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생 지도자들은 이미 임시 정부 안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입니다.”

무슈투크는 현재 학생들이 수도와 그 밖 지역에서 거리 순찰을 돌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봤다.

“그들은 경찰이 부재한 다카시(市)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무질서와 기물 파손 행위를 일으키는 세력은 패배한 아와미연맹의 무장 폭력 배들과 이슬람주의 비밀 단체들입니다.

“학생 지도부와 민주적 좌파 모두 저들에 맞서 저항하고 승리를 지켜 내자고 민중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는 처음부터 방글라데시 사회의 독재나 부패보다 더 커다란 것을 향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운동을 촉발한 것은 법원이 아와미연맹 지지자들에게 유리하도록 만든 정부의 [공무원] 할당제를 재도입하라고 판결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분노 자체도 졸업생과 청년들의 엄청난 실업 때문이었다. 또한 노동자, 빈민, 상당수의 중간 계급이 영향을 받은 생계비 위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 재난은 지난 몇 주 동안 더 커지기만 했고, 이 사실은 임시 정부를 엄청나게 압박하고 있다. 민주적이고 사회 정의가 살아 있는 새로운 방글라데시를 건설하기 위한 포부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유리 프라사드

출처 Yuri Prasad, 'Fight goes on for real change in Bangladesh' (2024. 8. 13) / 번역 김중환

공개 토론회

관심 있는 주제, 가까운 지역을 찾아 보세요



더 많은 공개 토론회 상세 정보

서울 서부

트럼프, 해리스, 격동의 미국 정치

일시 8월 21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한겨레교육 703호 (신촌역 6번 출구 도보 5분)

발제 김준호 (노동자 연대) 국제 담당 기자 외국인 참가자를 위해 전문통역사의 영어 동시통역 제공

참가비 4000원 (학생, 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서부지역 모임들 문의 010-8074-2793 / s-west@ws.or.kr

서울 동부

트럼프, 해리스, 격동의 미국 정치

일시 8월 22일(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서울 흥사단 3층 강당 (해운역 1, 2번 출구 사이)

발제 김준호 (노동자 연대) 국제 담당 기자 외국인 참가자를 위해 전문통역사의 영어 동시통역 제공

참가비 5000원 (학생, 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동부지역 모임들 문의 010-8862-8377 / s-east@ws.or.kr

경기/인천

트럼프, 해리스, 격동의 미국 정치

일시 8월 28일(수) 오후 7시 30분

장소 신도림역 2층 가온대회의실 (신도림역 1호선 지상층 개찰구 앞 4~6번 출구 방향)

발제 김준호 (노동자 연대) 국제 담당 기자 외국인 참가자를 위해 전문통역사의 영어 동시통역 제공

참가비 5000원 (학생, 난민 3000원)

주최 노동자연대 경기/인천 지역 모임들 문의 010-6224-2157 / kyongi@ws.or.kr



방글라데시 반정부 시위 배후가 미국이라는 주장은 조잡한 음모론

김영익

8월 5일 방글라데시 총리 셰이크 하시나가 사퇴하고 헬리콥터를 타고 인도로 도망가면서, 수많은 방글라데시 민중이 기뻐했다.

그런데 하시나는 자신을 쫓아낸 시위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에서 이렇게 밝혔다. “내가 [벵골만의 방글라데시 섬인] 세인트 마틴 섬과 벵골만을 미국에 넘겼다면 권좌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자신이 세인트 마틴 섬을 미국 공군 기지로 넘기지 않자 미국이 배후에서 자신의 축출을 추진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하시나의 ‘미국 배후론’은 음모론일 뿐이다. 거리로 쏟아진 그 수많은 민중은 미국 대사관이나 정보기관의 지령에 따라 움직인 것이 아니라, 그간 누적된 불만을 스스로 터뜨린 것이었다.

지난 20년간 방글라데시 경제는 연평균 6퍼센트씩 성장해 왔다. 하지만 그 과실은 노동자와 서민층 다수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최근 수년간 생계비 위기로 고통받았다.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빈곤층이 크게 증대하기도 했다.

이 와중에 하시나 정부는 수출 위주의 성장 전략을 유지하며, 간접세 비중을 늘리고 법인세 인하와 부자 감세를 단행해 민중의 고통과 불만을 키웠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번 시위 전부터 생계비 위기에 대한 민중의 불만을 강경하게 단속해 왔다. 파업을 탄압하고 반정부 활동가 수만 명을 투옥했다.

그래서 많은 노동자 등 서민이 학생들이 주도한 이번 반정부 시위를 지지한 것이다.

“색깔 혁명?”

그렇지만 반미주의 좌파 언론 〈민플러스〉는 하시나의 주장을 지지한다. 8월 12일 〈민플러스〉는 러시아 국영 통신 〈스푸트니크〉 보도 등을 인용해 반정부 시위를 “미국 대사관과 소로스 NGO의 흔한 꾀단이 조직한 매수 시위를 이용한 고전적인 색깔 혁명”이라고 비난했다.

하시나 퇴진 이후 “미국의 사랑을 받고 있는” 무함마드 유누스가 임시 정부 지도자가 돼, 나토가 세인트 마틴 섬을 통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안보 협력을 위해 미국 외교 사절단을 만난 하시나 정부의 외무장관(가운데 남성)

전에도 〈민플러스〉를 비롯한 반미주의 좌파들은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2019년 홍콩 항쟁, 2021년 미얀마 쿠데타에 저항한 대중 항쟁을 지지하지 않았다.

이 나라들의 독재 정부들을 ‘반제국주의’ 세력으로 오해해서다. 서방 제국주의와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라면, 그 국가의 권력자들이 아무리 부패하고 억압적이고 착취적이어도, 그에 항의하는 노동계급 대중보다 진보적인 구실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조야한 흑백 논리이자 엘리트주의적 음모론이다. 대중 자신의 경험과 의식적인 활동, 사회 세력들 간의 관계와 맥락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최근 수년간 하시나 정부는 방글라데시의 부정부패와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미국 바이든 정부와 불편한 관계이긴 했다.

그러나 〈민플러스〉가 보는 것과는 달리, 그것이 그림의 전부는 아니었다. 그런 불협화음 속에도 안보 협정 체결을 논의하는 등 미국과 방글라데시의 외교 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다.

8월 15일 〈워싱턴 포스트〉는 1년 전 하시나를 지지하는 인도 모디 정부가 하시나 정부에 대한 압박을 멈춰 달라고 미국에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하시나가 권력을 잃으면 방글라데시에서 인도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이슬람주의 운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 그 근거였다.

“결국 바이든 정부는 방글라데시의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면서 하시나 정부에 대한 비판을 상당히 완화하고 추가 제재 위협을 보류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에 대적하는 파트너인 인도의 요청을 방글라데시 인권 향상보다 중시한 것이다.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 근무했던

미국의 한 전직 외교관은 이렇게 말했다. “뉴델리와 워싱턴은 방글라데시 국민과 그들의 민주적 열망을 편들지 않음으로써 방글라데시를 잘못 이해했음을 인정하고 겸손함을 보여야 한다.” (〈워싱턴 포스트〉 8월 15일 자)

무엇보다, 방글라데시 반정부 항쟁을 색깔 혁명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엘리트주의의 발로다. 수백만 대중을 서방 정보기관과 언론의 선동에 놀아나는 사람들로 여길 뿐, 그들이 투쟁 과정에서 자기 조직과 의식을 스스로 발전

시킬 수 있음을 보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하시나는 소수의 음모가 아니라, 대통령 관저 앞까지 몰려간 거대한 대중 운동에 의해 축출된 것이다. 현지 좌파 활동가와 노동자들이 이 시위를 지지하고 동참했다.

군부는 거리 운동이 지속되고 더 급진화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하시나를 퇴진시키고 서둘러 정치적 양보를 해야 했다.

그래서 지금 임시 정부를 이끄는 유누스는 군부 등 기존 권력자들과 거리 시위를 이끈 민중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처지다.

방글라데시 반정부 시위는 진정한 변화를 이룰 가능성을 힐끗 보여 준다. 가령 경찰이 도망가자, 학생과 지역사회 단체들이 민주적 조직을 꾸려서 교통과 치안을 맡고 있다.

〈민플러스〉와 같은 관점은 이렇게 대중 자신의 투쟁이 창조한 가능성을 무시하기 쉽다.

방글라데시에서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가 쟁취되기를 바란다면, 좌파는 방글라데시 학생과 민중의 저항을 지지하고 방글라데시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위선을 폭로해야 한다.

방글라데시의 ‘질서’ 회복을 바라는 주변 강대국들

방글라데시는 미국, 중국, 인도 등이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쟁투를 벌이는 국가 중 한 곳이다. 하시나는 자신이 이런 쟁투의 부당한 희생양이라고 선전하며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려 한다.

인도에게 방글라데시는 파키스탄과의 경쟁과 중국의 남아시아 진출 견제에 꼭 필요한 국가이다. 그래서 인도 모디 정부는 하시나 정부와 친밀한 관계를 이어 왔다.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방글라데시에 많은 대출을 제공하며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 왔다. 지난 7월 하시나는 시진핑을 만나 중국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기도 했다. 하시나는 라이벌인 인도와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하면서 군사적·경제적 이익을 챙기려 해 왔다.

중국·인도·미국은 (하시나 집

권 시절에도 그랬듯이) 하시나가 도망간 방글라데시에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는다.

세 국가 모두 중요 국가기구가 붕괴된 방글라데시에서 기성 질서가 회복되기를 바라며, 이후 상황이 자국에 불리하지 않도록 대비하고자 할 뿐이다.

하시나가 물러난 다음 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조속히 사회 안정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도 모디 정부도 방글라데시의 “안정”을 바란다고 밝히며, 방글라데시 정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독재자가 물러났어도 방글라데시에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수도룩하다. 이 와중에 방글라데시의 ‘질서 회복’은 민중 항쟁을 종식시키고 부패하고 억압적인 엘리트들이 위기에서 벗어날 기회를 주는 것일 뿐이다.

이주민 유입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열악한 처우를 이유로 지지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김광일 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임준형 본지 기자

전 세계 이주민과 좌파에게 경종이 울리고 있다. 유럽에서는 인종차별과 이주민 반대를 주요 무기로 삼고 있는 파시스트와 극우 세력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약진했고, 프랑스 총선에서도 파시스트 국민연합이 결선에서 3위에 올랐다. 반파시즘 공동 투쟁들이 활발한 영국에서조차 파시스트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다행히 8월 17일 반파시즘 전국 시위가 성공적으로 반격을 가했다.) 미국에서는 집권 시절 야만적으로 이주민을 단속하고 이른바 “불법이민자”에 대한 강력한 추방 정책을 주장해 온 트럼프가 가을 대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다.

이른바 “극단적 중도”(신자유주의적 중도좌파 정당) 정부들은 이민 규제 정책들을 강화해 왔다. 이런 정책들이 극우와 파시스트들의 기를 세우고 이들의 주장에 힘을 싣게 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주민 유입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는 우리나라에서조차 매우 중요한 문제다.



100:1의 경쟁률을 뚫고 8월 6일 한국에 온 필리핀인 가사노동자들

출처: DMW Pre Employment and Government Placement Bureau in Action

국경 통제와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이주민 통제는 결국 국가의 국경 통제를 바탕으로 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경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국가의 국경 통제도 필요하고 당연한 것으로 흔히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일상적 시기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라고 지적했다. 자본주의 사회의 다른 많은 ‘상식’처럼 국경 개념과 엄격한 국경 통제는 자본주의 사회의 산물이었다.

근대 초기인 17세기까지만 해도 유럽의 지역 왕국과 공국 사이의 경계는 모호했다. 그러나 18세기 산업 자본주의의 등장과 맞물려 신생 국민국가들이 형성되면서 국경과 국경 통제가 등장했다. 국경은 지리적 차원에서 국민 개념을 나타내는 구실을 하고, 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 국경을 기준으로 “국민(시민)”에 속할 자격이 주어졌다. 동시에, 국경은 “국민(시민)”에 속하지 않아 배제할 사람을 판별하는 기준이기도 했다.

마르크스는 1870년 영국인 노동자들이 아일랜드인 노동자들을 향해 갖는 민족주의적 감정이나 인종차별적 정치

가 결국 자본가 계급에게 유리한 결과를 낳는다고 썼다.

“오늘날 영국의 모든 산업과 상업 중심지에서 노동계급은 영국인 프롤레타리아와 아일랜드인 프롤레타리아라는 두 적대 진영으로 분열돼 있다. 평범한 영국인 노동자는 아일랜드인 노동자를 자신의 생활수준을 낮추는 경쟁자로 여기며 미워한다. 그는 아일랜드인 노동자와 비교해 자신은 지배 민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며, 그 결과 아일랜드

에 맞서는 영국 특권 계급과 자본가들의 도구가 된다. 그렇게 해서 영국인 노동자들은 자신을 지배하는 자들의 힘을 강화해 준다.”

노동자들이 국경 통제와 이주민 단속에 반대해야 하는 핵심 이유는 계급 내부 이간을 막는 것이라는 것이다.

국민국가가 형성된 이후 지배계급 내에서 모순과 논란이 존재했다. 민족(국민) 개념이 이윤 추구에 항상 효과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유럽연합을 둘

러싼 영국 지배계급의 내분은 하나의 두드러진 사례다.)

그래서 지배계급의 일부는 국경 단속 강화를 주장하며 이주민 배척 운동을 벌이고, 다른 부분은 값싼 노동력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자유로운 이주를 주장한다. 물론 흔히 이 두 가지를 절충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즉, 일정 수준의 이주민을 받아들이면서도, 입국을 허용하는 대가로 열악한 처우와 권리 제한을 강요한다.

국제적 차원의 경쟁과 갈등도 국경 단속 수준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제1차세계대전 직후에 국경 단속이 강화됐다. 오늘날 보편화된 비자 제도, 출입국 관리 시스템이 이때 처음 도입됐다. 그러나 제2차세계대전 이후에 세계경제의 성장과 장기 호황 때문에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은 이주민 유입을 늘렸다.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2008~09년 공황 이후 최근 15년의 상황을 보면, 국경 단속이 점점 중요해졌다. 장기 경제 침체에 따른 노동계급의 불만이 점증하는 상황에서 국경 단속을 강화하며 불만을 이주민과 난민에게 돌리려 하기 때문이다.



목숨을 걸고 2014년 지중해를 건너는 난민선

출처: The Italian Coastguard

이주민 유입에 대한 개혁주의자들의 입장



이주노동자 추가 유입을 지지하지 않는 입장

특히, 난민이 급격히 증가하자, 서방의 중동 개입의 피해자인데도 이들을 받지 않으려고 서방 지배자들은 국경 단속을 강화했다. 지난 10년간 유럽에 가려다 익사한 난민이 수만 명이다. 이를 정당화하는 데 이슬람·무슬림 혐오가 이용되고 있다. 이슬람·무슬림 혐오는 인종차별의 최신 형태다.

한국의 이주민과 국경 통제

한국도 이주민 유입이 늘고 있다. 올해 6월 기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261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퍼센트에 이른다.

한국 정부는 2024년 고용허가제로 유입하는 노동자 수를 16만 5000명으로 늘리고 업종도 확대했다.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 전반적인 교육 수준 향상으로 한국인이 기피하는 일자리에서 그들은 부족한 노동력을 메우고 있다.

세계적 난민 증가의 영향으로, 한국으로 오는 난민도 늘고 있다. 2023년 한국의 난민 신청 건수는 1만 8838건

으로 2022년 1만 1539건에 비해 약 63퍼센트 증가했다. 국경 단속의 피해자이자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탈북민의 규모도 현재 3만 4000여 명이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입국을 허용하는 대가로 이주민의 권리를 제약하거나 박탈한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업장을 변경하면 한국에서 쫓겨날 수 있다.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결혼 이주 여성은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체류 연장이 어렵다. 이 때문에 남편에 대한 종속이 심해지는 경우가 적잖다.

난민 신청자들은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도 어렵고 각종 사회보장제도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이런 통제를 벗어난 미등록 이주민들을 야만적으로 단속해 추방하고 있다.

이주민 차별은 2007년 여수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와 최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로 비극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런데 노동조합 지도자와 개혁주의 정당들은 이미 한국에 들어온 이주민의 처우 개선은 지지하면서도, 이주민 추가 유입은 지지하지 않는다.

건설노조의 일부 조직들은 더 나아가, 건설 현장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출입을 막아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는 등 이주노동자를 노골적으로 배척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점점 번져 가는 현상이다.

물론 일자리 문제의 절박함을 못 본체하고서 건설 노동자들에게 도덕적 비난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뒤에서 더 설명하겠지만) 이주노동자 배척은 매우 근시안적인 태도다.

조합원 채용을 내세우다 보니 단지 미등록 이주노동자만 배척하게 되는 게 아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한국노총 건설노조가 서로 자기 조합원 우선 채용을 요구하며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노총 건설노조는 민주노총 건설노조보다 더 노골적으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척을 요구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조합원 우선 채용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임금 저하 없이 노동시간을 줄이고 노동강도를 낮춰서 일자리를 늘리는 등 모든 건설 노동자를 단결시킬 수 있는 요구를 내놓고 싸워야 한다.

모든 개혁주의자들이 건설노조의 일부 조직들처럼 노골적으로 이주노동자 배척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 개혁주의자들은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겪을 열악한 처우를 이유로 유입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들은 노동력이 부족한 이유가 해당 일자리의 임금이 낮고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라며,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면 인력난이 해결될 것이라고 옳게 주장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 차별 반대를 말한다. 그래서 언뜻 이주노동자를 위하는 듯이 보이지만, 이주노동자를 유입시키기 전에 먼저 내국인의 유입을 유도하라는, 즉 내국인 고용을 우선하라는 주장(때로 함축적이다)이 수반된다. 이런 보수적 요구에 이주노동자 차별 반대라는 진보적 포장지를 씌운 것이다.

오는 9월 시작되는 서울시의 외국인(필리핀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에 대해서 지난해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이 결성돼 이런 입장을 취해 왔다. 그 기구에는 가사·돌봄 노동자들이 조직돼 있는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노총 가사·돌봄서비스지부, 공공운수노조 서

울사회서비스원지부 등 노동조합,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외노협,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등 이주민 운동 단체들, 녹색당, 사회주의를향한전진과 같은 급진 좌파 등이 포함돼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 계획이 처음 발표됐을 때 민주노총, 진보당, 정의당도 시범사업 중단을 요구했다.

지난 8월 6일, 시범사업으로 일할 필리핀인 가사노동자들이 한국에 입국하자 이주노조와 민주노총 등이 포함돼 있는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시범사업 프로세스에 이주노동인권단체와 노동조합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가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에 속해 있다는 점에 비춰 보면, 외국인 가사노동자 유입을 반대하거나 적어도 그 수급 조절에 자신들이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듯하다.

이주민 지원 엔지오들의 연대체인 외노협은 올해 5월 “열악한 내국인 가사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하고 정부와 서울시에 따져 묻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인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는 올해 4월 〈한겨레〉 기고글에서 “인력난 완화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방안을 고려하자는 제안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우리 사회에 돌봄 서비스 인력이 모자란 게 아니라, 이들을 돌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는 문제에 먼저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조선업 이주노동자 유입을 확대하자 조선업종의 원하청 노조들도 생색내는 온정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울산 동구에 출마한 민주노총 후보 이장우(노동당 소속) 후보가 이런 배경 속에서 이주노동자 유입을 지지하지 않는 주장을 선거운동에서 했다. 조선업의 중심지인 울산은 최근 이주노동자 유입이 늘었다.

사실 이런 입장은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현상이 아니다. 영국에서 세 번째로 큰 노조인 영국일반노조(GMB)는 2022년, 당시 보수당 정부가 돌봄 부문에 인력이 부족하다며 이주노동자를 들여오려 하자 이렇게 주장했다. “인력 부족 해결책은 해외 노동자 수입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의 임금 지급이다.”

역사적 경험은 국제주의에 불철저한 노동단체(노조와 정당)는 점점 더 개혁주의적이 돼서,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를 놓고도 제대로 지키지 못함을 보여 주었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이주노동자 유입 반대?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일자리에서 고통받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행을 지지하지 말아야 할까?

이는 그런 일자리에도 취업해야 하는 당사자들의 절박한 필요를 외면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네팔 정부가 한국 고용허가제 조선업종 한국어 능력시험에 탈락한 네팔 노동자들에게 제조업 한국어시험 응시를 금지하자 네팔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네팔 당국의 강경 진압으로 이 시위에서 두 명이 사망했다. 그만큼 한국행이 절박했던 것이다.

열악한 처우를 이유로 이주민 유입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너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안다’는 오만한 태도일 뿐이다. 이주민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실제 그렇게 한다. 이주에 위험과 고통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향에 머무르는 것보다는 나은 합리적 선택이기 때문에 이주하는 것이다.

한국은 중동이나 다른 아시아 나라에 비해 이주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이 조금은 나은 편이다. 서울시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에 필리핀인 100명을 들여왔는데, 한 재한 필리핀인 공동체 활동가에 따르면 필리핀 현

지에서 무려 1만 명이 지원했다고 한다. 사우디아라비아나 홍콩에 가사노동자로 가는 것보다 한국의 조건이 상대적으로 낫기 때문이다.

한국행이 막히면 그들은 사우디아라비아나 홍콩에서 더 열악한 조건으로 일하거나, 자국의 훨씬 더 열악한 일자리에 취업하거나 아니면 실업자가 될 수도 있다. 홍콩은 가사노동자 시급이 2797원이다! 심지어 애초부터 미등록 신분으로 한국에 오려 할 수도 있다.

파독

이런 온정주의적 논리라면 또, 상대적으로 열악한 노동조건이 강요되는 여성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말라고 주장해야 할 것이다.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자. 1960~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서독에 한국 노동자들을 광원과 간호사로 보냈다. 당시 서독의 광원과 간호사는 열악한 일자리였다. 그렇다면 서독 좌파와 노동조합은 한국인 노동자들의 유입을 지지하지 않아야 했을까?

단결과 저항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주노동자 유입과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처우 개선을 대립시키는 것은 부정확하다. 사실 정부가 최근 조선업에 이주노동자 유입을 급격히 늘리기 전까지 몇 년간 조선업 사용자들은 노동력 부족을 겪으면서도 임금을 올리지 않았다.

고용과 임금 수준은 정해진 몫이 있어서 이를 노동자들끼리 나눠야 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 몫을 줄이려는 사용자에게 맞서 쟁취해야 하는 것이다.

경제 상황이 나빠도 노동자들이 효과적으로 투쟁하면 일자리를 지키고 복지를 얻어 낼 수 있다. 1930년대 대불황기에조차 미국 노동자들의 투쟁이 그런 사례다.

무엇보다, 이주노동자 유입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에서도 정부의 주기적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미등록 이주민은 꾸준히 늘어, 올해 6월 기준 41만 명이 넘는다. 전체 이주민의 약 16퍼센트다.

많은 ‘진보’ 단체들이 외국인 가사노동

자 도입을 지지하지 않는 사이에 올해 4월 정부는 결혼 이주민의 본국 가족과 이미 한국에 와 있는 유학생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가사·돌봄업종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최저임금 적용을 회피하려는 것은 물론 문제다. 그러나 결혼 이주민의 본국 가족에게 한국에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또, 유학생들이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취업하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그랬다가는 한신대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주노동자 유입이 한정된 일자리를 빼앗아간다고 볼 게 아니라, 그들을 환영하고 함께 조건 개선을 위해 투쟁하고 조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몇몇 부문에서는 이미 이주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상당 부분을 이루고 있다. 건설업에 종사하는 전체 노동자 약 180만 명 중 이주노동자는 32만 명이

이주노동자 유입이 내국인 일자리와 임금 감소의 원인인가?

이주노동자 유입 대신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으로 해당 일자리에 먼저 내국인을 유도하라는 보수적 포퓰리스트 주장은 이주노동자 유입을 내국인 고용, 임금 인상과 대립시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의 전제는 이주노동자가 유입되면 그 부문의 임금이 떨어지고 내국인의 고용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즉, **노동자들이 나눌 파이의 크기는 고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제로섬 견해는 지난해 말 독일 좌파당에서 분당해 신당을 창당하고 유럽의회에 진출한 자라 바젠크네히트의 주장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과도한’ 이주민 수용이 ‘부족한’ 자원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을 낳는다면, 이 경쟁이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극우를 강화시킨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바젠크네히트는 이주민이 고국에서 교육받고 일하는 것이 이주민 자신과 그 나라에도 더 낫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고용과 임금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없다.

2017년 미국 국립과학원(NAS)은 이민자 유입이 미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방대한 증거를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민자 유입이 고용과 임금에 미

치는 영향은 아주 작다는 것이 보고서의 중요한 결론이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시리아 난민 360만 명이 튀르키예로 피신했는데 이는 튀르키예 인구의 4.4퍼센트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난민 유입이 임금에 미친 영향은 미미했고, 비공식 분야의 실업률이 조금 상승했지만 공식적 분야의 고용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주, 국가를 선택하는 사람들》, 2024년, 헤인 데 하스)

이는 한국의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IMF 위기나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이주민 수는 감소하거나 거의 변동이 없었지만 한국 노동자들은 고용 위기와 실질임금 감소를 겪었다. 이런 일부 기간 외에는 한국의 이주민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실업률은 큰 변동이 없었고 실질임금도 대체로 올랐다.

반면 총소득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몫인 노동소득분배율은 1990년대 이래로 하락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이런 사실들은 일자리 감소나 임금 인상 억제가 경제 상황이 악화되거나, 지배자들이 노동자 몫을 점점 줄여 온 탓이지 이주노동자 증가 때문이 아님을 보여준다.

넘고, 그중 11만 명 이상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추정된다(건설근로자공제회, ‘2024년 건설근로자 수급전망’). 반면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은 14만 명이고, 한국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수를 합쳐도 25만 명가량이다.

또, 2024년 3월 기준 조선업 고용 규모는 약 11만 3000명이었고 그중 이주노동자 비중은 무려 13퍼센트이다. 대부분 조선업 빅3 기업의 조선소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을 경쟁자로 여기고서 노조가 힘을 발휘하는 데는 절대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 때문인지 기존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주노동자는 조직하고 함께 싸우겠다면서, 신규 이주노동자 유입은 지지하지 않는 주장도 있다. 예컨대 지난해 11월 정부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도입 규모와 업종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자 금속노조는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2022년] 51일간 파업을 벌였던 조

선소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를 정부와 자본이 모두 수용했다면 국내 노동자, 청년들이 조선소로 다갔을 것이다. … 정부는 ‘질 낮은 일자리의 이주화’를 즉각 중단하라. … [금속노조는] 국적과 등록 상태를 불문하고 이주노동자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으로 조직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이주노동자 추가 유입을 반대하고 내국인 고용을 우선하라는 맥락에서 ‘질 낮은 일자리의 이주화’를 중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주노동자를 조직해서 함께 싸우겠다고 한다. 그러면 그 대상은 기존의 이주노동자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나 신규 이주노동자가 일자리 감소와 저임금을 낳는다고 여긴다면, 기존의 이주노동자까지 문제 삼는 것으로 이어지기 쉽다. 정해진 몫을 노동자들끼리 나눠 가져야 한다고 전제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금처럼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럴 수 있다.

우리의 기본 입장 해설 15

스탈린과 국가자본주의의 부상

이오시프 스탈린 치하의 러시아는 어떤 종류의 사회였는가? 러시아가 사회주의를 자처하지조차 않는 지금, 이런 질문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세 가지 이유에서 이는 중요한 문제다. 첫째, 사회주의가 스탈린 치하의 러시아와 같은 것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주의자가 되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토록 잔혹한 전체주의 정권을 수립하거나 옹호하기 위해 싸워야 할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둘째, 오늘날에도 스탈린 치하 러시아를 모방하려는 사회들이 있다.

마지막으로, 스탈린 치하 러시아 사회의 성격 문제는 사회주의를 핵심 산업의 국유화로 조야하게 이해하는 주장과 연결돼 있다.

우리 노동자연대는 국제사회주의 경향(IST) 창립자 토니 클리프가 개척한 주장을 따라 러시아가 1928년부터는 “국가자본주의”의 한 종류였다고 주장한다.(이하에서는 혁명 러시아와 구분하기 위해 1928년 이후의 러시아를 ‘소련’이라고 부르겠다.)

소련은 영국이나 미국의 자본주의와는 달랐지만, 그럼에도 자본주의의 핵심 특징 두 가지를 갖고 있었다. 첫째, 노동자와 빈농이 생산수단(공장, 탄광, 사무실, 토지 등)에 대한 실질적 통제력을 갖지 못했다.(노동자·빈농과 통제력의 분리) 소련에서는 서방 만큼이나 노동자들이 민주적 통제력을 갖지 못했다.

둘째, 결정적으로 중요한 또 다른 분리가 있었는데 자본이 상이한 단위들로 나뉘어 있었다는 것이다. 비록 소련 내부에서는 경제적 경쟁이 없었지만, 스탈린 정권은 서방과 군사적으로 경쟁했고 이를 위해 서방의 방법과 특징들을 도입했다.

스탈린이 권좌에 오르기 전까지 볼셰비키당은 자신들의 생존을 국제 혁명에 걸었다.

그러나 스탈린은 “일국사회주의”를 채택했다. 이는 다른 나라의 반란에 희망을 거는 것을 중단하고 경제 발전, 특히 중공업 위주의 산업화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생존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소련은 경제적으로 서방에 한참 뒤쳐졌기 때문에 그러려면 노동자와 빈농을 가혹하게 착취해야 했다. 산업혁명의 온갖 잔혹함이 압축된 기간 내에 집약돼 나타났다.

스탈린은 이렇게 말했다. “산업화 속도를 늦춘다는 것은 뒤쳐진다는 것이고, 뒤쳐지는 자들은 패배하기 마련이다.”

1938년이 되면, 탄약이 경제의 총 산출물에서 약 29퍼센트를 차지했다. 1928년에 시작한 5개년 계획은 그런 과정의 일부였다.

생산

이후 소련은 갈수록 더 많은 산출물을 소비재 생산이 아니라 생산수단의 생산에 배치했다. 1923년에는 산출물의 44.3퍼센트가 생산수단의 생산에 배치됐는데, 1940년에는 그 비중이 61퍼센트로 올랐다.

노동자들을 착취할 조건을 확립하기 위해 스탈린은 혁명 초에 생겨났던 노동자 권력의 시스템들을 파괴했다.

강제 노동도 흔한 것이 됐다. 강제 노동 수용소에 수감된 인원이 1928년 3만 명에서 1935년 500만 명으로 늘었다.

국가는 임금도 억제했다. 정규직의 구매력은 1928년~1940년 동안 약 37퍼센트 떨어졌다.

사회 최상층에서 관료층이 성장하며 평범한 사람들과 분리된 집단을 형성했고 그들은 축적을 위해 소련을 통제했다. 그들은 지배계급의 구실을 했고 그들의 이해관계는 노동계급에 적대적이었다.

이것이 소련 정권의 억압적 지배의 뿌리였다. 클리프는 이렇게 주장했다. “소련 국가가 강력해지고 그 전체주의가 강화된 것은 사회주의가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고, 심대한 계급적대의 결과로만 설명될 수 있다.”

클리프는 소련이 “국가의 수중에 집중되고 잔혹한 관료들이 지도하는 현대적 산업 경제”로 변모했음을 상세히 보였다. 노동자 권력의 시스템들이 사라진 상황에서 관료들은 자신들의 물질적 지위를 굳혔고 사회주의적 진전이 일어날 일체의 가능성을 파괴했다.

그런 사회가 전진하려면 새로운 사회적, 정치적 혁명이 필요했다.

이 글은 본지의 기본 입장을 해설하는 기획 연재의 열다섯 번째 글이다. 다음 연재에서는 1949년 중국 혁명이 사회주의 혁명이었는지, 그 진정한 성격에 관해 다룰 것이다.



이주민 환영!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가 함께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결론

자본주의는 세계 체제이고, 노동계급은 보편적인 세계적 계급이다. 동시에 자본주의가 경쟁하는 여러 국민국가로 분리돼 있는 점 때문에 노동계급도 국경을 따라 분리돼 있다.

한편, 자본가는 노동력을 충분히 공급받기 위해 해외에서 노동자를 들여와야 하는 일이 흔하다. 자본주의 발전의 지역적 불균등, 자본주의가 낳는 세계적 불평등과 빈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외국으로 이주해 일하려는 사람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의 역사는 국제적 인구 이동의 역사이기도 했다.

그래서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도 노동계급은 다양한 ‘인종’(또는 국적)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의 노동계급도 다인종 노동계급이 됐다. 세계 체제로서의 자본주의에 맞서려면, 각국에서 지배자들에게 맞서려면 내국인과 이주민의 단결을 추구하는 국제주의가 필수적인 이유다.

조금이라도 나은 일자리를 찾아 이주하려는 것은 정당하고 당연한 욕구다. 이런 움직임을 옥죄고 통제하는 것이야말로 이주노동자들이 차별받고 고통받는 진정한 이유다. 자본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데, 왜 평범한 사람들의 이주는 규제돼야 하는가?

따라서 어떤 그럴싸한 명분과 조건을 달든지 노조와 좌파 정당이 이주노동자 고용·유입 제한 입장을 펴면, 이주민을 둘러싼 정치 지형이 우파에게 유리하게 형성될 수 있다. 이주노동자를 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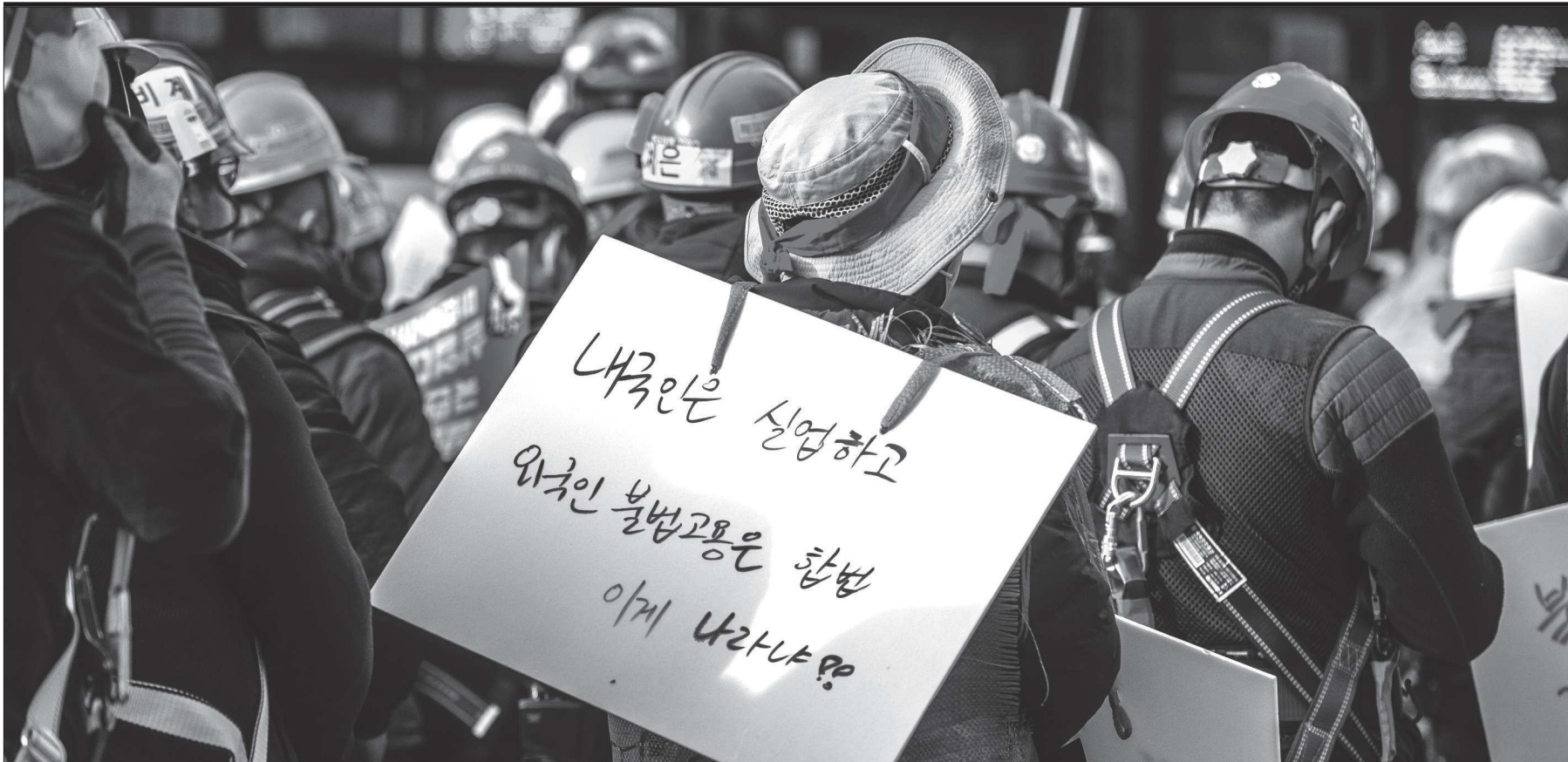
용과 임금 인상의 장애물로 여기는 정서를 부추길 수 있고, 그러면 지배계급은 필요에 따라 때로는 이주민 유입을 늘리면서도 이를 빌미로 더한층 통제적인 정책을 펼 수 있다. 지금도 한국 정부는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을 이른바 ‘일자리 잠식’을 우려하는 국민 정서를 명분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게다가 (건설노조 등) 일각의 이주노동자 배척 입장은 이주노동자들이 국내 노동조합을 불신하게 만들 것이다. 그러면 이주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의존하거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사용자들은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 그 결과 모든 노동자들의 임금과 일 자리를 더 열악하게 만드는 압력이 커질 것이다.

요컨대 내국인 노동자들을 우선 보호하자며 이주노동자 유입을 제한해서 얻을 ‘이득’은 기껏해야 매우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것이다. 지금 같은 경제 침체기에는 그런 ‘이득’조차 없을 수도 있다. 전체 노동계급에게는 결국 더 큰 손해로 돌아올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과 차별에 반대한다면 이주노동자 유입 통제 정책을 지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주민 유입을 무조건 환영하며 이주민들의 노동조건, 정치적 권리 향상과 국경 통제를 반대해 싸워야 한다.



‘내국인 우선 고용’은 경제 위기의 책임을 이주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노동자들을 국적에 따라 분열시키는 잘못된 주장이다

왜 국제주의가 중요한가

김인식

얼마 전에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100명이 입국했다. 입국한 필리핀 노동자들은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가 묻어나는 인터뷰를 했다.

그러나 좌파와 노동운동 내에서 필리핀 노동자들을 환영하는 목소리를 듣기가 어렵다.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그전에도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주노동자의 유입을 지지하지 않았다.(더 자세한 내용은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입국 환영한다’ 정부는 더 좋은 처우 보장하래’를 읽으시오)

반면 노동자연대는 필리핀 (더 일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을 환영한다고 분명하게 주장했다.

이런 차이에 근본적으로 깔려 있는 쟁점은 국경 개방(이주민 환영)과 국경

통제(이주민 통제) 중 무엇을 지지할 것인가, 즉 국제주의인가 국가주의(이하 민족주의)인가 하는 문제다.

노동자연대가 지지하는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전통은 국경 통제를 반대하고 국경 개방을 일관되게 옹호한다. 그것이 노동자 연대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의 결론인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아래 글에서는 토박이 노동자와 이주노동자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국제주의를 다루겠다.(국제주의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미국 등 서방과 러시아 간의 제국주의적 전쟁, 팔레스타인 민족해방 운동 등을 다루는 데서도 유용한 분석 방법을 제공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다룰 예정이다.)

왜 마르크스는 국제주의를 강조했는가

국제주의의 필요성은 자본주의 사회의 본질 자체로부터 제기된다.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 분단선은 자본가 계급과 노동계급 사이에 놓여 있고, 따라서 한국 노동자는 한국 자본가가 아니라 필리핀·방글라데시·인도네시아·이집트·미국·프랑스 등지의 노동자와 공통점이 훨씬 더 많다.

또, 자본주의가 세계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본주의에 맞서려면 세계적 수준에서 싸워야 한다.

따라서 혁명가들에게 국제주의는 온정주의적 생색내기가 아니라 정치적 필요성의 문제다.

카를 마르크스가 국제주의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 것도 그래서다.

두루 알듯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세계화’를 처음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적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계

급 국제주의를 원칙이자 전략으로 제시한 최초의 사상가이기도 한다는 점이다.

마르크스는 제1인터내셔널(1864~1876년)의 규약을 작성하면서 다음과 같이 썼다.

“노동계급의 해방은 한 지역이나 일국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서, 그것은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들을 포괄하며, 그 해결책은 가장 선진적인 나라들의 실천적이고 이론적인 협력에 달려 있다.”

노동계급의 의무

제1인터내셔널 출범 연설에서도 마르크스는 국제주의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제 정치의 수수께끼에 통달하는 것이 [노동계급의] 의무다. 어떻게 해서

든 자국 정부의 외교 활동을 감시하고, 필요하다면 최선을 다해 저지한다. 저지할 수 없다면 일제히 규탄해야 한다.

“그런 대외 정책에 맞선 투쟁은 노동계급의 해방을 위한 보편적 투쟁의 일부다. 만국의 노동자들이여, 단결하라!”

마르크스 당대에 “현대 사회,” 즉 자본주의는 서유럽과 북미에 한정돼 있었다. 오늘날 자본주의는 문자 그대로 전 지구적으로 확대됐고, 각각의 국민경제가 그에 종속돼 있는 세계 경제가 창출됐다.

그런 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고 통합돼 있다. 그래서 하나의 사건이 국제적으로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예컨대, 세계 경제 시스템은 전 지구적 위기를 만들어 낸다. 세계적 규모의 경제 위기,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지

정학적 충돌, 재앙적인 기후 위기, 팬데믹 등등.

동시에, 자본주의가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세계 노동계급이 창출됐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자신의 무덤을 파는 사람들, 즉 노동계급을 만들어 낸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많은 노동자들을 공장과 사무실에 한데 모은다. 그들이 대규모로 파업하면 공장과 사무실이(그리고 효과적인 경우 사회 시스템도) 멈춘다. 노동자들은 자본주의에 도전하는 데에 객관적 이해관계가 있다. 그래서 계급투쟁은 세계 노동자들의 공통된 투쟁 방식이 된다.

계급투쟁이 고양되면 국경을 넘어 국제적 규모로 확산된다. 1917~23년 러시아와 서구 혁명, 1968~75년 반란, 2011~13년 아랍 혁명 등이 그런 사례들이다.



카를 리프크네히트(연단 가운데)는 국제주의에 헌신하며 애국주의와 국익론에 맞섰다. 1918년 12월, 독일

혁명적 좌파와 개혁주의 좌파의 차이

그러나 세계 노동계급이라는 생각이 많은 노동자들에게 인식될 만큼 계급 투쟁 수준이 높게 고양되는 것은 안타깝게도 흔치 않고 이례적이다.

그래서 국제주의가 많은 노동자들이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주장으로 들릴 때가 훨씬 더 많다. 가령 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들이 내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나 노동조건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을 흔히 접한다.

이런 시기에 국제주의는 애국주의(민족주의)와 국익이라는 사상에 맞서야 함을 포함한다.

그래서 혁명가들은 독일 혁명가 카를 리프크네히트가 주창한 “주적은 국내에 있다”는 기치를 국제주의의 핵심으로 삼는다.

국제주의는 해외의 투쟁들을(그저 찬양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활용해 국내에서 자국 지배계급과 그들의 정책을 반대하는 운동을 건설하려 애쓰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에게는 조국이 없다”고 말한 것도 그런 의미였다.

“주적은 국내에 있다”

개혁주의자들의 입장은 이와 정반대다. 민주노총 지도부나 진보당·정의당 등 ‘진보’ 정당들은 국내 거주 이주노동자의 조건 개선을 요구하면서도(그 자체는 필요한 일이다), 이주노동자의 새

로운 유입을(노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대개 이주 노동자들이 임금을 낮춘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사용자들이 내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깎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을 수입한다는 것이다. 사용자들이 그런 식으로 임금을 낮추고 싶어 할 수는 있겠지만, 모든 통제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의 임금 수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 준다.(관련 기사 8~11면)

개혁주의자들이 국경 통제를 반대하지 않는 더 원칙적인 이유는 개혁주의에 내재된 고유한 문제점과 관련 있다.

개혁주의의 정치적 목표가 기존 국가를 인수하는 것이라면 그 국가의 이익(‘국익’으로 불리는)을 자신과 동일시하게 된다.

그리고 그 국가는 자국 자본 축적에 조응해 노동계급의 자유로운 이동을 막는 국경 통제를 유지한다. 이주노동자가 산업예비군 구실을 할 수 있기 때문에(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그들을 본국으로 추방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를 수도권까지 열고 잠그듯이 유연하게 유입하기 위해서다.

결국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개혁주의자들의 태도는 이주노동자들의 필요성이나 노동계급의 단결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자국 자본주의의 상태와 선거 압력에 따라 결정된다.

국제주의는 공상이 아니라 활동 길잡이이다

국제주의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쟁점 하나는 우리가 국제적인 적과 대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일국 수준에서 분쇄될 수 없다. 마르크스의 절친이자 혁명가인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1847년에 쓴 《공산주의의 원리》에서 이렇게 썼다.

“이 혁명[1848년 노동계급 혁명]은 어느 한 나라에서만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 아니다. 세계 시장을 만들어 낸 대규모 산업 때문에 이미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은 …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과 무관하게 살 수 없다.”

무엇보다, 세계의 지배계급이 성공한 혁명을 교살하기 위해 유혈난자한 개입을 할 태세가 돼 있음을 역사는 거듭 보여 줬다. 1917년 러시아 혁명 직후 그랬다.

그러나 국제 지배계급의 반혁명적 개입은 서로 다른 나라의 노동자들이 서로를 지지하며 자국 지배자들에 맞서는 운동을 구축함으로써 상쇄할 수 있다.

그래서 레닌은 1918년, “독일 혁명 없이는 우리가 멸망할 것이라는 점은 절대적인 진리”라고 말했다.

독일 혁명

독일 노동자들이 러시아 노동자들처럼 자국 지배자들을 전복하고 노동자 국가를 수립하면 러시아 혁명도 유지되고 강화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그런 기대는 헛된 꿈이 아니었다. 독일 노동자들이 1918~1923년 혁명을 일으켰다. 이탈리아에서는 1919~1920년 노동자들이 공장 점거 운동을 벌였다(‘붉은 2년’). 헝가리·핀란드에서도 혁명이 일어났다. 서유럽 전역에서 노동자 운동이 크게 고양됐다.

곳곳에서 사회주의를 위한 객관적 조건들이 존재했다. 불세비키 혁명이 촉발시킨 국제적 위기로 인해 국민국가의 경계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에서 결여됐던 것은 불세비키와 같은 효과적인 혁명적 조직이었다.

독일 노동계급과 병사들은 혁명을 일으키고 노동자·병사 평의회를 건설했지만 사회민주당의 교란과 집요

한 방해로 혁명이 패배했다.

혁명의 국제적 확산이 여의치 않게 되자 불세비키는 암울하게 버티며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노동자 반란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거나, 아니면 서방과 경쟁하기 위해 자국 노동자와 농민을 착취해야 했다.

레온 트로츠키가 이끈 좌익반대파는 전자의 노선을 대표했다. 트로츠키는 이렇게 주장했다. “사회주의 건설은 일국적·국제적 규모에서 계급투쟁의 기초 위에서만 생각할 수 있다.”

후자의 노선은 스탈린이 지도하는 신흥 관료층이 대표했다. 스탈린은 서로 투쟁하는 국가들로 이뤄진 세계 시스템 안에서 다른 국가와 경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해 수많은 농민들이 땅을 빼앗겼고, 굴락(강제노동수용소)에 수용된 사람들의 숫자는 최대 550만 명(1953년)이었으며, 생산의 노동자 통제는 깡그리 파괴됐다. 사회주의는 노동계급을 희생시켜서라도 국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과 동의어가 됐다.

러시아 혁명이 촉발시킨 국제적인 혁명 물결은 비록 패배했지만, 국제 사회주의는 추상적 유토피아가 아니라 실질적 가능성이었음이 드러났다. 그리고 1917~23년이 국제 사회주의의 실제적 가능성을 보여 준 유일한 시기였던 것도 아니다.

국제 운동의 역학은 결코 유토피아적 개념이 아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구조 자체를 반영하는 것이다.

물론 각국의 투쟁은 동일한 속도로 발전하지 않는다. 자본주의가 세계 시스템이지만, 국민국가가 위기의 파장과 영향을 조절한다.(그래서 국가는 자본가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좌파와 노동운동의 상태도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나라 간의 차이로 인해 각국의 투쟁은 불균등하다. 그러나 한두 주요국에서 성공을 거둔 운동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행동을 하도록 고무할 수 있다.

20~21세기 역사는 《공산당 선언》의 마지막을 장식한 “프롤레타리아가 잃을 것은 쇠사슬밖에 없으며 얻을 것은 온 세계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가 진실임을 얼핏얼핏 보여 줬다.

마르크스에게 그리고 오늘날 활동하는 혁명가들에게 국제주의는 공상이 아니라 활동 길잡이이다.

8·15 팔레스타인 연대 집중 행동의 날 1000여 명의 행진이 거리에서 큰 환영과 지지를 받다

‘팔레스타인 연대 집중 행동의 날’ 집회가 8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이스라엘 대사관 맞은편 도로에서 열렸다. (주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6월 23일 전국 집중 행동의 날에 이어 두 번째로 1000명을 넘긴 이 집회에는 팔레스타인인들, 이집트인 등 아랍인들, 방글라데시 노동자 등 다양한 인종과 국적,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참가했다. 부산·울산·대구에서도 버스를 대절해 참가했다. (영어와 아랍어(구두 통역), 벵골어와 인도네시아어 통역(화면 자막)이 제공됐다.)

집회가 열리기 전부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의사들이 온열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한 부스를 차리고,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노무사모임도 노동 상담 부스를 차려 참가자들을 지원했다.

사회를 맡은 팔레스타인인 유학생 나리만 씨를 비롯해 이날 집회의 의의를 강조하며 집회를 열었다.

“최근 가자 지구에서 발생한 타바인 학교 학살과 칸 유니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상 공격 같은 끔찍한 학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무한한 지원을 받으며 팔레스타인뿐 아니라 중동 전체에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범죄에 맞서고 팔레스타인의 대의가 여전히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 주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나리만 씨를 비롯해 이날 집회와 행진에서는 여러 재한 팔레스타인인 청년·학생들이 발언과 구호 선창 등 주도적으로 활약했다.

해방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출신 엔지니어이자 인권 운동가인 마르얌 씨가 첫 발언을 했다. “시온주의자들은 팔레스타인인들의 대의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범죄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자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해방의 대의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인 아흐마드 마타르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꽃을 죽였다. 꽃은 말했다. 내 뒤에는 반란을 일으킬 새싹이 있다고.’”

팔레스타인인 유학생 나심 씨는 계속 연대할 것을 호소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불의와 학살 앞에서 단 한 순간도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10월 6일 일요일 서울에서 열릴 전국 집중 행동의 날에 반드시 참가해 주십시오. 이 학살이 끝날 때까지, 모든 억압받는 사람들이 자유를 쟁취할 때까지 이 행진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팔레스타인 만세!”

나눔문화 윤지영 연구원은 팔레스타인 문제를 오랫동안 알리고 해방을 지지해 온 박노해 시인의 시를 인용하며 “팔레스타인 광복의 날을 향해 함께 걸어가자”고 호소했다. “세계의 모든 어둠과 악이 총동원되었어도 결코 굴복



한반도가 일제 강점에서 해방된 8·15에 팔레스타인 해방을 지지하는 시위가 열린다

시킬 수 없는 한 사람이 살아 있다면 저들은 총체적으로 실패하고 패배한 것이다.”

이집트인 정치 활동가 알리 씨는 아랍 정부들도 규탄했다. “가자지구에 대한 살육과 말살, 시온주의 적의 포위 공격에 가담한 아랍 정부들을 필두로 모든 세계 강대국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을 실망시켰지만, 우리는 가자지구에서의 전쟁이 멈출 때까지 절망하지 않을 것이며 멈추지도 않을 것입니다.”

미국인 영어 강사 스튜어트 씨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35억 달러의 무기 구매 자금 지원을 발표하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이스라엘이 타바인 학교 등을 공격했다며 미국을 규탄했다. “미국 정부는 분쟁의 중재자가 아니라 인종 학살의 공범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건설하고 있는 활동가들도 지역을 대표해 발언했다.

최근 첫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대구 참가자들을 대표해 발언한 김미경 씨는 “이스라엘의 만행에 맞서 이 먼 한국, 그리고 대구에서도 계속 팔레스타인 연대 행동을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울산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분과동지 연대회의 활동가인 권준모 씨는 울산의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해를 넘겨서도 꾸준히 지속되고 성장하고 있다며 참가자들을 고무시켰다.

부산 참가자들 대표 발언은 재한 이집트인 샤이마 씨가 했다. “한국인들은 독립을 요구하며 평화 시위도 벌였고, 일제에 맞서 무장 저항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팔레스타인 광복절을 기념하게 될 것입니다.”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가 계속 불어났다. 행진이 시작될 즈음에는 집회 시작 때의 두 배가 돼 있었다. 청년·학생 자원봉사자들은 나눠 주는 팔레스타인 손깃발과 팻말을 받아 들고 행진에 합류한 이들이 100명이 넘었다.

기세 있는 행진이 거리에서 환영 받고, 즉석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것은 정치적·도덕적 대의명분의 힘을 보여 준다.

“팔레스타인 독립 만세! 룽 리브 팔레스타인!”을 외치며 시작된 행진은 미국 대사관, 인사동, 종로를 거쳐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분노에 찬 구호들과 함께 마무리됐다.

글로벌 팔레스타인 운동이 상대적으로 언론의 초점에서 벗어나 있고, 폭염과 방학, 휴가철 등의 악조건 속에서도 이날 집회에 6월 23일 전국 집중 행동의 날(2000여 명)에 이어 또다시 1000여 명이 전국에서 모였다. 이는 한국의 글로벌 팔레스타인 운동의 저변이 꾸준히 확대돼 왔음을 보여 준다.

이재혁·김문성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 설정

- 다양한 주제의 토크쇼 영상
- 주요 시사 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620여 개 콘텐츠 체계적 분류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를 저항, 역사, 전망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지금 구독하세요!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문의: 02-2271-2395

ws.or.kr/join

ws.or.kr/what-we-stand-for

기본입장

미국이 이스라엘의 인종 학살에 또다시 막대한 무기를 지원하다

찰리 김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피로 물들이는 가운데, 미국은 이스라엘이 인종 학살을 벌이도록 200억 달러어치 무기 수출을 또다시 승인했다.

미국 국무부는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이 무기 수출을 승인했다고 밝혔는데, 거기에는 전투기와 미사일이 포함돼 있다.

국무부는 13일 이렇게 밝혔다. “미국은 이스라엘의 안보에 헌신한다. 이스라엘이 강력하고 준비된 자체 방어 능력을 유지하고 개발하도록 돕는 것은 미국의 핵심 국익이다.”

이번 무기 판매에는 보잉사의 F-15 전투기, 미사일, 탱크 포탄, 고폭탄 박격포가 포함돼 있다. 그에 며칠 앞서 미국은 해외군사금융(FMF) 제도를 통해 이스라엘에 35억 달러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제도는 해외 정부에 미국 무기를 구입할 돈을 지원 하는 것이다.

이번에 수출하기로 한 무기 중 50여 대의 전투기 등 일부 품목은 실제로 전달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 폭력적이고 확장주의적인 시온주의 국가를 미국이 굳건하고 장기적으로 지원할 것임을 보여 준다.

3만 3000발의 탱크 포탄이나 5만 발의 박격포 포탄 같은 다른 무기들은 더 빠르게 이스라엘에 도착할 수 있다.

미국은 탱크 포탄이 “이스라엘이 현

재와 미래 적들의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스라엘의 자국 방어를 강화하고, 지역 위협 요인을 억제하는 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런 발표는 이란과, 레바논에 기반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보복할 것이 예상되는 시점에 나왔다. 앞서 이스라엘은 저항 단체 하마스와 헤즈볼라의 고위 지도자들을 암살했다.

조쉬 풀은 지난해 가자지구 정책에 항의하며 국무부에서 사임한 인물이다. 그는 이스라엘이 “극도의 잔혹함”을 버리고 있다고 볼 만한 어떤 이유도 미국에 제시하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막대한 액수의 무기 이전을 또 승인하는 것은 가자지구에서의 만행과 레바논에서의 갈등 고조를 지속하라고 이스라엘에 백지 수표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스라엘에 대량 살상 기술을 전달한다는 결정과 때를 같이 하여,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의 선본은 무슬림과 아랍계 미국인들에게 “손을 내밀” 담당자 인선을 마쳤다. 이를 통해 해리스는 대선 선거 운동에서 무슬림과 아랍계 미국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를 원한다고 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는 최근 해리스의 유세 집회에 휘방을 놓았고, 다음 주 시카고에서 열릴 민주당 전당 대회 장소에서 큰 시위를 계획 중이다.[전당대회 첫날인 19일 월요일, 수천 명이 모였고 경찰과 충돌해 통제선을 일부 뚫기도 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으로 살해된 쌍둥이 아이젤과 아세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갓 태어난 쌍둥이를 살해하다

미국의 무기 판매 소식이 나올 때 가자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이 민간인들을 공습으로 도륙하고 있었다. 희생자 중에는 신생아 쌍둥이도 있었다. 미국 국무부가 이스라엘 신규 지원을 발표하기 불과 수 시간 전이었다.

두 아기는 10일 데이르 알발라에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은 아파트를 폭격해 두 아기를 살해했다.

아버지 무함마드 씨는 이렇게 말했다. “갓 태어난 우리 아이젤과 아세르의 출생 확인서를 막 받은 참이었습니다.”

무함마드 씨는 8월 13일 화요일 출생 확인서를 받으려고 일찍 집을 나섰는데, 이스라엘이 자신의 집을 폭격했다는 이웃들의 전화를 받았다.

무함마드 씨는 아내인 주마나 아라파

씨와 갓 태어난 쌍둥이들도 폭격에 희생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아이젤과 아세르는 제 기쁨의 시작이자, 끝이 났습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무함마드 씨의 가족은 이스라엘-가자지구 전쟁 초기 몇 주 동안 내려진 가자시티 소개령에 따랐다. 이스라엘군이 명령한 대로 가자지구 중부에서 피난처를 찾으려고 애썼다.

이스라엘의 방법은 직접 인명을 죽이는 것만이 아니다. 기근도 또 다른 무기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단체인 ‘기근 조기 경보 체제 네트워크’에 따르면, 개전 이래 가자지구 남부 국경을 통해 반입된 인도적 식량 지원은 지난 7월 최저 수준에 이르렀다.

출처 Charlie Kimber, ‘US floods Israel with more weapons for genocide’ (2024. 8. 15) / 번역 김중환

이스라엘이야말로 휴전 협상 방해꾼이다

▶ 16면에서 이어짐

미국·이집트·카타르가 중재한 가자 전쟁 휴전 및 인질 교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휴전 협상은 7월 말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자와 헤즈볼라 최고 사령관을 암살한 데 대해 이란과 헤즈볼라가 보복을 다짐한 상황에서 재개됐다.

미국은 휴전 협상을 이용해 이란의 보복 공격을 자제시키려 한다.

이를 위해 미국 국무장관 앤터니

블링컨은 8월 18일 네타냐후를 만났다.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열 번째 만남이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와 현지인들은 협상 타결과 관련해 부정적인데,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라는 게 신중한 낙관론을 자아내는 한편, 골대를 옮겨 협상에 동의하지 않는 책임을 하마스에 전가하기 때문이다.”(알자지라, 8월 14일 자)

이번에도 네타냐후는 하마스가 동의하지 않는 새로운 조건을 추가했

다. 이스라엘군을 필라델피 회랑(가자지구와 이집트 시나이 반도의 경계)에 영구 주둔시키고, 가자지구 북부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실항민들을 검문하고, 팔레스타인인 수감자에 대한 석방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조차 네타냐후가 이끄는 이스라엘 정부가 협상 타결에 장애물을 놓는 당사자라고 말한 사실이 폭로됐다.

네타냐후는 하마스를 제거하지 못

한 상황에서 가자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또, 그는 인종 학살을 중단하고 싶지 않은 이스라엘 극우의 환심을 사고자 한다.

그래서 네타냐후는 그동안 휴전 협상 타결 기회를 기피하고 방해했다. 그는 미국이 휴전 압력을 가해도 이스라엘이 자신의 방식으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는 사실을 터득했다.

당연히 하마스는 새로운 협상에 관심이 없다며, 바이든이 5월 말에 제안한 협상안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확전 위기의 책임은 이란에 있지 않다

김인식

가자를 넘어 전쟁의 위협이 중동에 다시 제기되고 있다. 이란과 그 동맹들, 특히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조율된 보복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란과 그 동맹들이 이스라엘에 어떤 공격을 가하든 확전의 책임은 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서방 제국주의에 있다.

이스라엘은 7월 말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서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예를 암살했다. 또,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헤즈볼라 사령관 푸아드 슈크르를 살해했다.

이 살해 사건들은 이란과 레바논 국민에게 굴욕감을 안겨 줬다. 이란 지도자들은 바로 보복 공격을 다짐했다.

이스라엘이 중동 확전을 부를 수도

있는 도발을 하는 것은 미국이 “철통같은” 지원을 약속하기 때문이다. “뺨 믿고 까부스” 것이다.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8월 11일(이하 현지 시각) 이스라엘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와 한 통화에서 “이스라엘 방어를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그 뒤 로이드 오스틴은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전투단과 조지아 유도 미사일 잠수함을 (중동 지역 관할인) 중부사령부 관할 구역으로 급파하라고 명령했다. 그곳에는 이미 시어도어 루스벨트 항공모함 전투단이 배치돼 있다.

그다음 날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에 총액 200억 달러(약 27조 원) 규모의 무기 공급을 승인했다.

또,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과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 지도자

들은 이란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스라엘을 공격해 지역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의 기회를 위태롭게 할 경우 이란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이란 외무부 대변인 나세르 칸아니가 이렇게 반박했다. “시온주의 정권의 범죄에 대한 어떤 이의 제기도 없이 뻔뻔스럽게 이란에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침해에 대응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네타냐후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이 지역을 항구적인 전쟁 상태로 만들려는 자신의 노력을 지지해 줄 거로 기대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의 주권을 두 번이나 침해했던 것이다.

이란은 힘의 균형과 역지력을 회복하기 위해 일정 수준에서 보복을 하려 할 듯하다. 현재의 확전 위기가 제한적

으로 일단락될지 아니면 지역 전쟁으로 번질지는 불확실하다.

만일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을 벌이면 전쟁은 두 국가에 한정되지 않을 것이다. 중동은 넓은 땅덩어리에 많은 행위자가 얹혀 있는 지역인 만큼 전쟁의 파장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동 확전을 반대하는 주장은 이해가 간다. 그러나 여기서 말을 멈춰서는 안 된다.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면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지지자들 사이에서 사기 저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쟁이 막상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혀 운동이 방향 감각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국 등 서방 제국주의의 지원을 받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 팔레스타인 민족해방 투쟁에 유리한 지형을 만들어 줄 것이다.



팔레스타인인들의 무장 저항은 계속된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민간인에게 거듭 소개령을 내리면서 이제 가자지구에서 “안전 지대”는 11퍼센트밖에 남지 않게 됐다.

전쟁 전에도 가자지구는 전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의 하나였다. 그런데 지금은 훨씬 비좁은 지역에 가자지구 인구 거의 전체가 강제로 갇히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의 가자 전쟁으로 가자지구에서만 팔레스타인인 최소 4만 99명이 사망하고 9만 2609명이 부상당했다. 사망자의 60퍼센트가 어린이와 여성이다. 약 1만여 명이 잔해 더미 밑에 깔려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8월 19일 현재).

이스라엘의 학살이 계속되고 빠른 속도로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 고통스럽다. 전황이 너무 단조로우 가자지구가 언론의 헤드라인

에서 멀어지고 서안지구의 인종 학살은 거의 보도조차 되지 않은 지도 꽤 됐다.

그러나 중동 지역에서의 제국주의 시스템은 크게 망가지고 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인들은 계속 저항하고 있다. 하마스 대변인 아부 오바이다는 줄여든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저항군 수천 명을 모집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수천 명이 여전히 입대를 기다리고 있다.”

가자지구 북부 마을 슈자이야에서 피난을 가지 않고 남아 있는 유세프도 그런 청년이다. 그는 죽음을 피해 계속 도망 다니기보다 하마스에 입대해 저항하고 싶어 한다. “점령은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앗아 갔다.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가 더 많아졌을 뿐이다.”(‘진보적 유대인 관점’을 표방하는 미국의 온라인 언론 <몬도와이스>, 8월 15일 자) 팔레스타인인들의 불굴의 저항은 글

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이 지속되는 동력이다. 글로벌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은 미국 기성 정치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조 바이든은 대통령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했다.

바이든을 대체한 카말라 해리스는, 노골적인 친(親)이스라엘/반(反)팔레스타인 정치인이자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인 조시 샤피로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지 않았다. 펜실베이니아가 격전지이기 때문에 샤피로가 부통령 후보가 될 거라는 관측이 많았는데도 말이다.

해리스는 샤피로 대신에 미네소타(민주당이 우세한 주) 주지사 팀 월즈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했다. 물론 월즈도 친 이스라엘 정치인이다. 그러나 샤피로가 지명되면 바이든을 낙마시킨 똑같은 압력이 가해질 거라는 민주당 지도부의

우려 때문에 그가 선택된 것이다.

수많은 팔레스타인인이 죽어 가고, 운 좋게 산 사람들은 지옥 같은 삶을 이어 가거나 극복이 쉽지 않은 트라우마를 겪는 상황에서, 이런 변화를 의미 있는 것으로 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대선 후보 교체를 둘러싸고 미국 민주당이 겪은 엄청난 혼란은 미국의 중동 지배력이 약화됐음을 반영한다.

미국의 중동 지배 위기와 함께, 이스라엘의 중동 경비 능력도 약화됐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1967년 이집트·요르단·시리아 등 아랍 3개국을 전격적으로 공격해 6일 만에 승리했던(‘6일 전쟁’ 또는 ‘제3차 중동 전쟁’) 이스라엘이 지금은 가자지구에서 다수가 민간인인 팔레스타인인들의 저항에 열 달 넘게 고전하고 있다.

▶ 15면으로 이어짐